

# 제13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결과보고

## □ 회의 개요

- 일시 / 장소 : '22. 11. 11.(금) 17:00 ~ 18:00 / 광안리 인근 식당
- 참석 : 총 16명 (15개 시·도 자치경찰위원장, 세종 자치경찰정책팀장 등)

※ 불참 : 충북, 세종, 전남 위원장

## □ 회의 내용

### <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의견 교환 >

-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
  - 이태원 참사 당일~익일 대응 관련 설명(참사 현장방문, 10.30. 자경위 회의 등)
  - 의결사항(22.10.30.) :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, 현장 긴급구조 지원,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 협조, 사후 조치사항 등 보고 등
  - 서울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 등

### < 회의 안건 >

- 국회 등 관계기관 건의 및 언론보도 활용 ➡ (전국 위원장 동의)
  - 자치경찰 제도개선 정책컨퍼런스('22.11.11.) 주요 내용과 그 간 협의회 차원에서 지적해왔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언론 보도 계획
  - ※ 서울, 경남 등 사무국장 선에서 정리 후 전국 위원장 회람 및 검토 → 언론 보도
- 위원장협의회 및 시·도 자경위 건의사항 점검

- (협의회 대정부 건의) 총 29건(반영 9, 미반영16, 추진중 3, 보류 1)
- (시·도별 건의) 총 26건(반영 2, 일부반영 2, 추진중 5, 미반영 16, 논의완료 1)
- ※ (서울) 정리된 자료의 오류 등을 지적해주면 수정·보충할 예정

## ＜ 위원회별 제출안건 ＞

- (대전) 경찰 업무 프로그램 사용권한 부여(시 감사업무담당 공무원)
  - 시 공무원은 경찰업무 프로그램(시스템)의 권한이 없어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는 등 자치경찰 사무를 감사하기 어려움. 현재 대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팀에 경찰이 없어 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
- (세종) '23년 자경위 국고보조금 재배분 협조
  - (협조 요청)' 23년 세종 자치경찰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시·도별 자경취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의 3.6% 정도를 유보금으로 확보
- (경북) 경북자치경찰 토크 콘서트 개최
  - 영남대, 경남대, 대구대 등 대구·경북권 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듣고, 자치경찰을 홍보하는 토크 콘서트 개최 예정

## ＜ 기타 제안사항 ＞

- (서울) 시의회, '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보장 촉구 건의안' 발표
  - 서울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2년 11월 7일 자치경찰사무 예산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하여 정부 각 부처로 보내겠다고 함. 각 시·도에서도 이와 같이 관련 부처로 보내는 노력을 해나갈 때 자치경찰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함.
- (제주) 감사 및 이원화 시 자경위 역할,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주 방문

- (감사) 제주자치경찰단 팀장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팀장을 하고 있어, 제주청에서 감사를 거부하였음. 조직개편을 통해 시 감사위원회 팀장을 자경위 감사팀장으로 데려왔는데 성과가 있었음. 일례로, ‘교통위반 신고’의 경우 규정 상 1주일의 신고기간이 지나면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범칙금을 모두 부과하도록 지적하였음. 경찰청은 규정 자체를 개선해야겠다고 하면서 감사결과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와서 준비 중임.
- (자경위 역할)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상관없이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고 있는데, 이원화될 경우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함. 이 경우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. 프랑스 비교시찰을 다녀왔는데 ‘파리시 자치경찰국’은 윤리위원회(비상임위원회)로 운영하면서 경찰국장 임용 관련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. (직접적인 정책추진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함)
- (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방문)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25일에 제주에 방문한다고 함. 이원화에 대한 의견수렴은 그 동안 많이 해왔는데, 24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이원화에 대해 의견수렴을 또 한다고 하여 이원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.

#### ○ (인천) 자치경찰위원회 - 경찰의 정보보고 체계와 연결고리 필요

- 자치경찰위원회는 시·도 뿐만아니라 경찰 내부 정보보고 라인과도 단절이 되어 있음. 서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운이 좋게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임. 경찰 내부보고 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집회 등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내용은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알려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함.

#### ○ (대구) 국가경찰의 정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공유는 쉽지 않아서 안전대책 또는 회의 등에서 상황 등을 알 수밖에 없음.

- 대구 자경위의 경우 경찰청 안전대책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

#### ○ (부산) 이원화는 시 경찰청 자체를 이관하여 시장에게 책임을 지울 수

있는 방식으로 해야 함.

- 지구대·파출소를 넘겨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한다고 해서 바로 자치경찰위원회에 지휘권이 생기는 것은 아님. 어차피 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됨. 이런 경우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함. 잘못하면 책임만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.

○ (경기남부) 자치경찰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심의·의결기구로 가야함.

- 만약에 경찰권이 시·도지사에게 가면 시·도지사의 경찰권 오남용, 사적이용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함.

○ (대전) 법상 지자체에서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, 경찰, 소방 등은 필요한 협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.

- 대전의 경우 시민안전실에 매뉴얼이 있는데, 기본적으로 시민안전실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음. 경찰은 시민안전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. 시민안전실에서 경찰에 협조 연락을 하고 있음.

○ (전북)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고, 자치경찰제가 중앙-지방협력회의 단독 의제가 되어야 함. 자치경찰의 필요성을 강조할 좋은 찬스임.

○ (서울) 오늘 위원장님들께서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,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면서 내실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음.

## 제13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

